

비무장지대(DMZ) 문화재 보존 및 조사연구 발전방안

이청규

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과

Corresponding Author : leeck@yu.ac.kr

비무장지대(Demilitarized Zone : DMZ)는 북위 38도 일대에 걸친 한반도 중앙에 동서 길이 248km, 폭 4km로 연결된 907km² 넓이의 공간이다. 1953년 이래 지금까지 66년 동안 출입이 통제된 비무장지대로서 한반도에서는 드물게 그 공간 내에 있는 자연문화유산이 상당 부분 파괴 변형되지 않은 원래의 모습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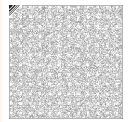
한반도 남북 방향의 생태축이라고 하는 백두대간에 비견되는 동서 방향의 생태축이라고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동 구역은 자연 지형을 염두에 두거나 자연과 문화유산 그 자체를 보존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설정한 보전구역이 아니므로 독립된 자연생태계를 갖추지 못하고, 별도의 역사문화적인 권역으로서 설명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20세기의 세계 냉전 체제와 민족 분쟁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근년에 들어와 더욱 활성화된 남북한 간의 평화적인 화해 무드 속에서 동공간의 보존과 활용이 큰 관심을 받기에 이르렀다. 앞서 지적한 바 처럼 개발에 따른 형질 변경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동 지역의 지리적 공간과 자연문화유산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한 이유에서 2018년 11월에 <DMZ 문화재 보존 및 조사연구 발전

방안>이라는 제목의 학술 심포지엄이 개최되었으며, 동 회의에서 발표된 논문 중에서 문화유산 분야 2편, 자연유산 분야 2편이 제출되어 이번에 수록된 것이다.

각 논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수십 년 동안 동 지역과 그 주변을 방문하면서 역사문화유산에 대해서 조사·정리해온 이재는 현재까지 알려진 비무장지대 내의 14종 35개소의 문화유산 중에서 후삼국 태봉의 철원도성과 조선 중기의 병자호란 전골총을 남북 공동조사의 최우선 대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조선시대 통신시설인 도라산의 봉수지를 복원하여 남북 간의 원활한 소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계기로 삼기를 제안한다.

또한 20세기에 19개국이 참전하고 220만 명이 사망한 한국전쟁 당시의 수많은 전적지와 고지, 땅굴, 진지, 그리고 휴전협정 이후 감시초소(GP), 군사분계선, 남북방 한계선 철조망, 판문점 등을 대상으로 선별하여 근대문화재로 등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비단 한국전쟁의 유산일 뿐만 아니라 100여종이 넘는 멸종위기종 및 천연기념물과 6,000여종이 넘는 동식물상을 갖추고 있으므로 비무장지대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과 세계자연유산의 자격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세계복합문화



유산으로 등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역시 오랫동안 동 지역의 자연유산 조사와 보존에 힘쓴 제종길은 비무장지대에서는 다양한 생물들과 습지를 비롯한 서식지와 지형들이 있고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는 서식 공간이 있기 때문에 다양성과 규모 면에서 견줄 만한 사례가 거의 없다고 주장한다.

한편 비무장지대와 함께 남측의 경우 민간인 통제선(Civilian Control Zone: CCZ) 이북과 그 배후 접경지역 또한 오랫동안 사람들의 출입이 제한되어 보존 상태가 더욱 양호한 사실에 주목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서식지 유형을 제대로 파악하고 관리한다면 한반도에서 멸종 위기에 있거나 멸종한 종들을 서식하게 하는 최적 장소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강원지역의 매장문화재에 정통한 심재연은 남북관계의 정세 변화에 따라 남한 고고학자들의 북한 문화유적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 비무장지대와 그 인접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문화유산에 대한 신중한 사전 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서 일제강점기 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철원도성에 딸린 석등을 제시하고 있다. 세키노 다다시(關野貞) 등의 일본인이 제출한 사진과 지도를 포함한 보고 자료를 살펴본 결과, 궁성 남쪽의 석등 1기 이외에 외성 남벽 동쪽에 치우쳐 고려 태조가 창건한 봉선사와 연관된 석등 1기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그는 또한 비무장지대 내의 철원도성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되기 전에 남방 한계선 이남의 관방유적 등의 매장문화재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한다. 도로 등의 인프라 건설과 농경지 조성이 철원도성과 그 방어 체계에 대한 조사와 보존을 어렵게 할 수 있으며, 실제로 최근 경원선이 복원되는 과정에서 철원도성 또는 봉선사가 훼손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유네스코의 자연문화유산 보존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조도순은 무엇보다도 <비무장지대 일원의 생태계>에 속하는 1,864종의 식물상 중에는 91종의 한국특산종 외에도 15종의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 125종의 환경부 지정 국가적색목록종, 그리고 457종의 식물구계학적 특정종이 있음을 지적한다. 그러한 비무장지대의 영구적인 보존을 위해서는 통일 후 2년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환경부의 자연유보지역으로만 지정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더 나아가 천연보호구역, 국립공원,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국내법에 따르는 자연보호지역 지정을 우선하고, 유네스코의 생물권보전지역과 세계유산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또한 현재 비무장지대의 지뢰는 철도도로 건설 지역 등을 제외하고는 제거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70여년에 걸쳐 이룩된 현재의 경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부 구역에 인위적으로 산불을 낼 필요도 있다고 피력하면서, 지난 70여년간 산불에 의해서 2차림과 묵논 습지가 유지되어온 독특한 생태적·경관적 가치를 내세워 세계유산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

이들 논문의 내용을 종합하여 간추리면 지금까지 접근이 어려웠던 비무장지대 구역의 자연문화유산에 대해서 1) 간접적으로나마 확인된 지금까지의 현황 종합과 분석 내용을 정리하고, 2) 물리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불리한 여건 속에서의 직접적이고 정밀한 조사 방안을 제시하며, 3) 각 유산의 특징과 상태에 걸맞게 대상과 범위를 선정하고 보존 대책을 마련한 다음, 4) 분단국가와 냉전 체제를 종식하고 우리 민족의 통합과 교류, 세계 평화와 자유를 도모하기 위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지질과 지형, 식물과 동물 등으로 구성된 자연

유산에 대해서 현지 접근이 불가능한 지금까지 그 주변지역을 조사한 데에 그치고 있는 바, 인위적인 산불과 경작 등에 의해 원상이 변질된 가운데에 온존한 현지 고유종 혹은 서식 생물 유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음이 지적되었다.

역사문화유산의 경우 근대 이전의 지하 매장, 지상 노출의 문화유산, 근대 이후의 건조물 유산과 전쟁 관련 유산 등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성격에 걸맞게 지표조사와 시굴, 그리고 정밀 발굴 등의 조사 방법을 강구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자연유산도 그러하지만 무엇보다도 매장된 문화유산의 경우 현지조사 혹은 지표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데, 출입 통제가 해제되더라도 동 지역에 지뢰가 매설되어 현장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난제가 있다. 그러한 이유로 인공위성 사진, 과거의 항공사진과 드론 등을 활용한 조사 방법이 제시되고 있는데, 남북한 당국 간에 전문적인 학술조사의 대상과 절차,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인 장치가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특히 매장문화재의 경우 형질 변경을 수반하는 지뢰 제거와 동시에 발굴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남북한 관계 전문가들이 나서서 상호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조사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

조사 과정과 방법도 그러하지만 다음 단계의 보존과 정비, 그리고 활용에 대해서 남북한 당국자 간의 충분한 협력이 절대 필요하다. 그것은 양측의 법과 제도의 정비를 수반하는데, 문화재 지정과 관리 등에 상호 합의된 법령과 제도, 그리고 협약에 관한 논의가 보다 적극적이고도 서둘러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남북한 국내법 이외에 세계유산, 지질공원, 보전구역 등 국제법과 협약에 따른 세부적인 검토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바, 이번에 발표된 연구 논문이 그 토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개략적인 제안에 그쳤을 뿐 보다 구체적이고도 체계적인 논의와

연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바, 끝으로 정부와 지자체 당국과 관련 학계의 긴밀한 협조가 절실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